

< 2021 국가9급 행정학개론 나책형 >

-총평-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는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출제된 주제는 생소한 이론이나 법령을 출제되지 않아 충분히 출제가 예상가능한 주제였지만 문제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헛갈릴 수 있는 선지가 많았으며, 특히 법령문제의 경우 법령의 내용과 구체적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약자료를 단순 암기하는 공부보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유형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난이도 문제

6번	12번	14번
근무성적평정	예산주기	공기업의 특징

-정답-

01	02	03	04	05
③	④	③	④	③
06	07	08	09	10
③	②	①	②	③
11	12	13	14	15
①	④	④	④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④

1. ③

- ① [O]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생산하는 외부 경제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과다생산되는 외부불경제로 나뉘며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 ② [O] 시장의 독점 상태는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이나 형평을 달성하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 ③ [X] X-비효율성은 독점시장에서 경쟁압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정부의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④ [O]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고갈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 등 적절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I 시장실패의 원인 I

공공재의 존재	비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시장생산 불가
외부효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점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로 인한 소수 경쟁체제에 의한 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 편중으로 인한 비효율적 배분

2. ④

- ① [O] 조직목표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일체감을 느끼게 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 ② [O]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므로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며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자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O]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밝혀 조직이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
- ④ [X] 조직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하므로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3. ③

- ① [X] 태스크포스는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과업이 해결된 후 해체되는 임시위원회에 해당한다.
- ② [X] 프로젝트 팀은 태스크포스와 같은 임시조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기적 조직에 해당한다.
- ③ [O] 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부수적 생산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해 다수 독립된 조직들에 분권화하여 협력관계로써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네트워크 조직에 해당한다.
- ④ [X]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혼합하여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이다.

4. ④

- ㄱ [X]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통제는 각급 기관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ㄴ [O]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통제에 해당하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ㄷ [X]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은 각급 기관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ㄹ [O]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ㅁ [X]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국무총리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ㅂ [O]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는 시민단체의 의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ㅅ [X]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는 각급 기관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O]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는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I 행정통제 I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감사원, 국무조정실, 각급 기관, 국무총리	국회, 사법부
비공식	행정윤리	언론, 시민단체, 주민참여

5. ③

- ① [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6조).
- ③ [X]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7조).
- ④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립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I 지방자치법 I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③

- ① [O] 일관적 오류는 규칙적 오류에 해당하며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규칙적·일관적으로 높은 점수 또는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강제배분법은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일관적 오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O] 근접효과는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이거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으로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으로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X] 관대화 경향은 평정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을 말하며 통계분포로 인한 오류이므로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비공식집단에서 발생하는 유대감이 있는 경우 평정 결과를 공개하면 피평정자와 불편한 인간관계에 놓일 수 있어 관대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 ④ [O] 연쇄효과는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피평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소를 한 번에 평정하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나타나기 쉽

다. 이 경우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하거나 강제선택법을 사용하여 평정 요소 간의 연쇄효과를 배제하여 연쇄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7. ②

- ① [O] 과학적 관리론은 능률성을 중시하는 경영합리화 운동으로 생산증진을 통해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하여야 한다.
- ② [X]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과학적 관리론에서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으로써 경제적 욕구에 동기 유발이 된다고 전제하였다.
- ③ [O] 과학적 관리론은 행정을 관리현상으로 인식하고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였으며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 ④ [O]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 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하여 과업을 설정한다.

8. ①

- ① [O] 신공공관리과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X]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이다.
- ③ [X]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경쟁(시장메커니즘)이다. 신뢰와 협력(참여메커니즘)을 관리 가치로 중시하는 것은 뉴거버넌스이다.
- ④ [X] 뉴거버넌스는 연계망을 통한 공동생산을 중시한다. 관리 기구로서 시장을 활용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I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I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공통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 산출통제, 민관협력, 정부실패의 대응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급주체	시장	공동생산
작동원리	경쟁	신뢰와 협력

9. ②

- ㄱ [O] 규제정책은 개인 및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정책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 ㄴ [X] 분배정책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이 있다.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ㄷ [O]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정책으로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하는 계급대립적 성격을 가진다.
- ㄹ [X]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포함되나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공적 재원으로 추진하여 다수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보조금 지급이므로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ㅁ [O] 구성정책은 정부기구를 구성·조정하는 정책으로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이 있다.

I 로위의 정책유형 I

분배정책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	SOC, 보조금 지급 등
재분배정책	이전정책	사회보장정책
규제정책	개인 및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구성정책	정부기구를 구성·조정하는 정책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의 모집·보수
------	------------------	---------------------

10. ③

- ① [O]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O]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1조).
- ③ [X]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한한다.
- ④ [O] 국회는 감사원이 감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I 대한민국헌법 I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1. ①

- ① [X]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② [O] 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로 명시되어 있다.
- ③ [O]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로 명시되어 있다.
- ④ [O]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로 명시되어 있다.

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I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I 국가공무원법 I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④

1 회계연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성(D-1Y)→심의(D-1Y)→집행(DY)→회계검사 및 결산(D+1Y) 과정을 겪는다.

- ① [O] 2022년 예산안 편성의 경우 2021년 5월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다(예산편성).

- ② [O]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은 2021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분한다(예산집행).
- ③ [O] 2022년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2021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예산심의).
- ④ [X]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감사원에서 작성한다(예산결산).

13. ④

- ①②③ [O]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이 가능한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④ [X]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I 국가재정법 I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4. ④

- ① [O] 공공수요가 있으나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은 민간부문의 자본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투자하여 담당하게 되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O] 사업 성격상 독점성이 나타날 경우 민간에 맡길 수 없으므로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O]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대기업 질서에 반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④ [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임원은 준공무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대기업조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15. ①

- ① [X]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노력과 보상의 정도가 준거인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O]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 ③ [O]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노력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O] 앨더퍼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좌절-퇴행접근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16. ①

- ① [X] 프로그램 집행 전과 집행 후 사용하는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오류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② [O]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할 경우 일반화가 곤란하여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③ [O]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호손효과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④ [O]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것은 크리밍 효과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I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I

호손효과	실험집단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 인지로 평소와 다른 심리적·감각적 행동을 하는 실험조작 반응효과
표본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대표성이 부족하여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큰 효과가 기대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여 일반화 곤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 처리를 하여 실험조작에 익숙하여 발생하는 일반화 곤란

17. ④

- ① [O]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로 취임한 주요 공직자의 파면을 주민이 요구하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간접민주주의로 불가능한 공직자를 통제하는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O]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O] 주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해직 등을 청구에 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④ [X]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I 지방자치법 I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I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I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8. ②

- ①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로 시민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한다.
- ② [X]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라기보다는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 ③ [O] 책임성을 다원적으로 보며 법, 공동체, 정치규범, 시민이덕 등 다양한 책임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O] 생산성보다는 인간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19. ②

- ㄱ [O]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하게 되므로 비용에 비해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X]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 ㄷ [X]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ㄹ [O]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할인율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 ④

- ① [O]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동기부여 기제이다.
- ② [O]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의 하위 차원에 해당한다.
- ③ [O] 공공조직 내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근무의욕이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므로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④ [X] 페리와 와이스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Ⅰ 공공봉사동기 Ⅰ

합리적 차원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규범적 차원	공공에 대한 봉사
감성적 차원	동정, 자기희생